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7. 20. / (총 10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박 은 정 김 우 람	전 화	044-202-1711 044-202-1713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팀	팀 장 담 당 자	하 태 길 박 소 연		044-202-1740 044-202-174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전자출입명부 보완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 기획점검 결과 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전자출입명부 보완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 기획점검 결과 분석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7월 말을 맞이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새로운 피서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안전한 집이나 사람이 물리지 않는 휴가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오늘부터 수도권 공공시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재개하는 만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하기를 당부하였다.
- 한편 6월 초에 도입된 전자출입명부(KI-Pass)가 전국적으로 13만여 개 시설에 설치되었으며, 이를 통해 접촉자 추적에 인력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다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 각각 적극적인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출입 시 반드시 등록할 것을 당부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7월 5일(일)부터 7월 18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1.4명으로 이전 2주간(6.21.~7.4.)의 31명에 비해 9.6명 감소하였다.

- 특히 지난 주(7.12.~7.18.)는 국내발생 환자 수가 10명대(15.9명)로 나타나 국내 감염은 계속 감소하는 양상이 유지되고 있으며,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호남권의 환자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수도권의 환자 발생 규모는 10명대*로 줄고 있다.

* 수도권 1일 평균 환자 수 : (6.21.~7.4.) 19.3명 → (7.12.~7.18.) 10.2명 (△9.1명)

○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7%대로 낮아졌고, 집단감염 발생 수도 직전 2주간(6.21.~7.4.) 16건에서 9건으로 줄었으며,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80%에 근접하고 있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6월 21일 ~ 7월 4일		7월 5일 ~ 7월 18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1.0명		21.4명
수도권	19.3명		10.2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5.8명	⇒	27.4명
집단 발생 ¹⁾ (신규 기준)	16건		9건
감염 경로 불명 비율	8.7% (57/655)		7.8% (53/683)
방역망 내 관리 비율 ²⁾	80% 미만		80% 미만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해외유입 환자는 지난 2주간 1일 평균 27.4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전 2주(6.21.~7.4.)에 비해 11.6명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최근 외국인 근로자, 교대 목적으로 입항한 선원과 이라크에서 입국한 우리 건설근로자 중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 다만 해외입국자는 모두 2주간의 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해외유입 환자는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어 이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은 거의 없으나,
 - 이는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7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6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해외유입에 대한 방역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 * 비자 제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정기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은 60% 이하로 운항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든 관리지표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코로나19 유행의 국내 확산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억제하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있으나,
 - 수도권과 호남권의 환자 발생이 계속 직장, 친목 모임 등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어, 긴장을 늦출 시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 아울러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응하여 개방성 원칙은 준수하면서도 틈새 없는 검역과 격리뿐 아니라, 해외에서 귀국하는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 전자출입명부(KI-Pass) 보완 및 향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전자출입명부(KI-Pass) 보완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지난 6월 10일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안내와 현장지도·점검 노력으로 등록시설과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 7월 19일까지 등록시설은 총 132,904개소*이며, 이 가운데 임의 시설 27,371개소는 의무시설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설치하였다.

* 의무시설 105,533개소, 임의시설 27,371개소

- QR코드를 발급받아 출입한 이용건수는 총 24,662천 건*이며, 현재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약 100만 건이다.

* 의무시설 19,556천 건, 임의시설 5,106천 건

○ 역학조사 시 접촉자 추적을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사례는 8개 시설, QR코드는 1,784건이다.

- 대표적인 사례로 전남 영광군은 확진자가 다녀간 운동시설의 같은 시간대 이용자 89명의 명단을 확보하여 이용자와 이용자의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경기 수원시는 확진자가 방문한 PC방의 이용자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가 확인되지 않은 PC방 접촉자 48명의 연락처를 추가 확보하여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조치를 하였다.

- 그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제재 조치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위반시설 행정조치 기준*을 마련·시행(7.10.)하였으며,

* (1단계) 통지 및 교육(계도기간 내 완료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 2단계 바로 적용)
(2단계) 시정명령 및 경고(집합금지 명령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안내)
(3단계) 집합금지 명령 또는 고발(병행 가능)

-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지속 개선*하고 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시설의 경우 지자체 승인 후 전자출입명부 등록 가능,
현장점검 시 시설별 통계 확인, 일주일 미사용 시설 알림 기능 마련 등

- 한편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네이버 뿐만 아니라, PASS 앱(6.24.), 카카오톡(7.1.)까지 QR코드 발급회사를 지속 확대하였고,

- 포스터·리플릿·안내책자 및 동영상을 제작·배포(7.1.)하여 사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도 이용자가 많은 임의적용 시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이용자·시설관리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19일(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관 266개소, ▲유흥시설 1,519개소 등 40개 분야 총 7,451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등 97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하였다.
 - 광주에서는 실내체육시설 99개소 등 1,266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77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전북에서는 유흥시설 480개소 등 623개소를 점검하여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8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20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66개반, 367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29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974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코로나19 안전신고는 7월 19일 61건이 신규 신고되어, 현재 총 1,126건(7.1.~)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706건(62.7%)을 처리 완료하였다.
 - 주요 조치사항으로 다수 고객이 방문함에도 발열 확인 및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통제가 없는 음식점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해당 시설에 관련 지침을 배부하고 계도 조치하였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19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2,654명이고, 이 중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821명,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833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527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7.19)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여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58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55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월 19일) 입소 242명, 퇴소 213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40명

- < 붙임 > 1. 전자출입명부 역학조사 활용 우수 사례
2. 감염병 보도준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 일반국민 10대 수칙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 수칙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6.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일반국민, 격리자, 확진자)
7.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8. 잘못된 마스크 착용 주의

붙임1

전자출입명부 역학조사 활용 우수 사례

□ 전라남도 영광군

- (정보요청) 전라남도는 7.5.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전라남도 영광군의 확진자 A씨의 전자출입명부 방문기록과 접촉자 정보를 요청함
- (정보확인) 시스템에서는 신청 즉시 확진자 A씨가 지역 내 ○○운동시설을 6.30. 14시, 7.1. 14시, 7.2. 11시 20분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확진자와 동일 시간대 이용자 89명(QR코드 89명)의 전자출입명부 명단을 확인하여 통보함
- (방역조치) 영광군에서 ○○운동시설 이용자 및 이용자의 접촉자(가족 등) **16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음

□ 경기도 수원시

- (정보요청) 수원시 팔달구는 경기도에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수원시 팔달구에서 확진된 K씨의 ○○PC방 출입과 관련하여 6.25., 6.26., 6.28., 6.29., 6.30., 7.1.의 방문자 명단을 요청함
- (정보확인) 경기도에서 7.6. 질병관리본부로 위 자료를 요청한 결과 K씨와 동일한 날짜의 방문기록 QR 개수는 539건이었음
- (방역조치) 역학조사관이 확인한 해당 영업소 총 접촉자 수는 171명이며, 그 중 자가격리자 22명, 능동감시 대상자 149명이었음
 -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대상자가 확인 되지 않았던 자가격리자 6명, 능동감시자 42명의 연락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었음. 해당 영업소 접촉자 중 증상이 있어 검사한 32명은 모두 음성이었음

붙임2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